

3野 “與 복귀 안하면 ‘위임’ 간주... 오늘부터 국조 시작”

국힘, 이상민 행안장관 해임안 처리에 전원 사의 ‘반쪽 국조’ 우려 민주·정의·기본소득당 ‘단독 강행’ 압박... “자료 비협조시 고발” 경고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동참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국회와 정부가 국정조사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관련 모든 권한을 야 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반쪽’ 국정조사가 될 우려가 커지자 ‘단독 강행’ 압포로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또 정부가 국정조사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조치에는 예외를 두지 않고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조직도 제출조차 거부한다”며 “정부 기관이 테러 조직도 아닌데 조직도를 숨기는 게 온당한가”라고 꼬아붙였다.

야 3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특위 일정을 연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조사는) 국가가 시민

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정조사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일부 희생자 부검 시 마약 검사를 권유하게 된 경위를 비롯,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112 신고체계, 정부가 유가족끼리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협의회 창립을 두고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등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 인지 밝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장림환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거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49재를 맞는 오는 16일 오후 6시에는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이름의 추

모제를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에 대해 “이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사실상 해임건의를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재난·안전 관리 주무장관에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도적 책임을 우선 물어달라는 상식적 요구마저 전면 거부하겠다는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경찰 인사권을 쥔 이 장관을 그대로 두면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국정조사에 성과와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 장관이 이재라도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사죄라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이재명 “민생 목소리 들겠습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1박2일 충청권 ‘경청 투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을 찾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하고 민생 행보에 재사동을 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천안 중앙시장의 민생 현장을 방문한 뒤 저녁에는 대전을 찾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

바닥 민심을 훑으면서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14일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북에서 탄운을 밟을 예정이다.

정기국회 동안 지역 일정을 최소화했던 이 대표는 당분간 매주 전국을 돌며 국민·당원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병훈·조오섭·이형석·김원이·김회재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병훈(동남울)·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을)·김원이(목포)·김회재(여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3년째 수상하는 이병훈 의원은 22년도 국감에서 ‘윤석열차’ 사건으로 불거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검열의혹, 정외대 개방 및 활용 과정에 드러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야당 의원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또 문화도시 지정 공모 과정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소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 열람 제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 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질의로 국정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 국감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서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국회,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국민국감을 선도에 유능한 민주당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3년 연속 선정된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사회

갈등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저지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주거지원 해결 ▲지역 속원 사업 해결 등 5대 실천과제를 세웠다. 윤석열 정부 혁신 이면의 숨겨진 구조조정 갑바람, 비정규직 양산 등 공공부문 민영화의 실체를 벗겨내고, 화물안전운임제 등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했다.

또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국감·정책국감을 선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 심각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증원과 지역사제 등 지방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지적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순위로 삼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안전 대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촉구해 11월 3일 범부처 차원의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이끌어 낸 성과를 크게 인정받았다. 더불어 이창양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경수 ‘MB 들러리 가석방’ 원치 않는다”

정부, 신년 특사 검토...기동민 “통합 원한다면 사면권 행사해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 전 지사도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와 관련 “김 전 지사 배우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 기회를 열기 힘든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풀이된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핍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 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서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의사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따라 진정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기 바란다”면서 “김 전 지사 등에 대한 온전한 사면 복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경우,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지사는 사면에 그치지 않고 복권까지 해주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3년 5월 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안동, 상업용지

-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17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10층, 72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3억

대인동, 상업용지

- 롯데백화점 부근
- 대지 156평
- 일반상업지역
- 오피스텔 허가 有 (9층, 64호실)
- 타용도 설계 변경 가능
- 매매 - 20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 중 17층
- 계 14평, 전 9평
- 무등산 방향
- 일조권 전망최상
- 사무실 전용
- 매매 - 6100만원

덕남동, 임야

- 전대병원 부근
- 지분매매, 2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그린벨트, 도로접
- 개발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6천만원

상담 및 문의. 010 - 4159 - 9700